

- 프로그램 -

(전체 사회: 지구촌나눔운동 조현주 사무총장)

시간	프로그램	담당
13:00~13:30	참가자 등록	KCOC
13:30~13:35	KoFID 공동대표 및 KCOC 회장 인사말	박용준 회장
13:35~14:00 (‘25)	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의 흐름	한재광 대표 (발전대안 피다)
14:00~14:30 (‘30)	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의 필요성과 OECD DAC Peer Review 권고 내용	남상은 팀장 (한국 월드비전)
14:30~14:40 (‘10)	한국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계획 공유 시민사회 역할 및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참여 방법	최순희 과장 (외교부) 오순옥 본부장 (KCOC)
14:40~15:30 (‘50)	질의응답 및 토론	좌장: 한재광 대표 (발전대안 피다)
15:30	마무리 발언 및 간담회 종료	조현주 사무총장 (지구촌나눔운동)

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의 흐름

한재광 대표
발전대안 피다

국제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의 흐름

2018. 7. 25.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공동대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부운영위원장
hanlight@hanmail.net

목차

1. 국제사회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2.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3.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
4. 결론

1. 국제사회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1. 역사적 흐름

- 1950~60년대 미국,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1970년대 캐나다, 노르웨이를 시초로 정부 양자간 공여기관이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1980년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개발원조정책에 적용되며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파트너십이 본격화됨.
- 1990년대 '신정책의제'노선의 채택으로 OECD DAC 공여국들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함.

1. 국제사회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 정부는 1960,1970년대 원조프로젝트의 낮은 성과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 NGO에 관심전환 시작함.
- 2009년 아크라에서 개최된 '3차 원조효과성고위급회담(HLF-3)' 결과문서인 '아크라행동선언(AAA)'은 CSO를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 중요성을 명시함.
-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양자간(Bilateral), 다자간(Multilateral)외 시민사회협력(Civilateral)으로 주목 받음.

1. 국제사회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2. 현황

- 2011년 OECD DAC 국가의 NGO에 대한(to and through)협력 규모 \$ 193억, 전체 ODA 중 14.4%, 양자간 ODA의 20.5%
- 2011년 OECD DAC 24개 회원국의 양자간ODA 중 NGO 협력 평균 비율 17.2%이고 2009년 16.7%임.

(한국은 2011년 2%, 2018년 계획 무상 5.2% 전체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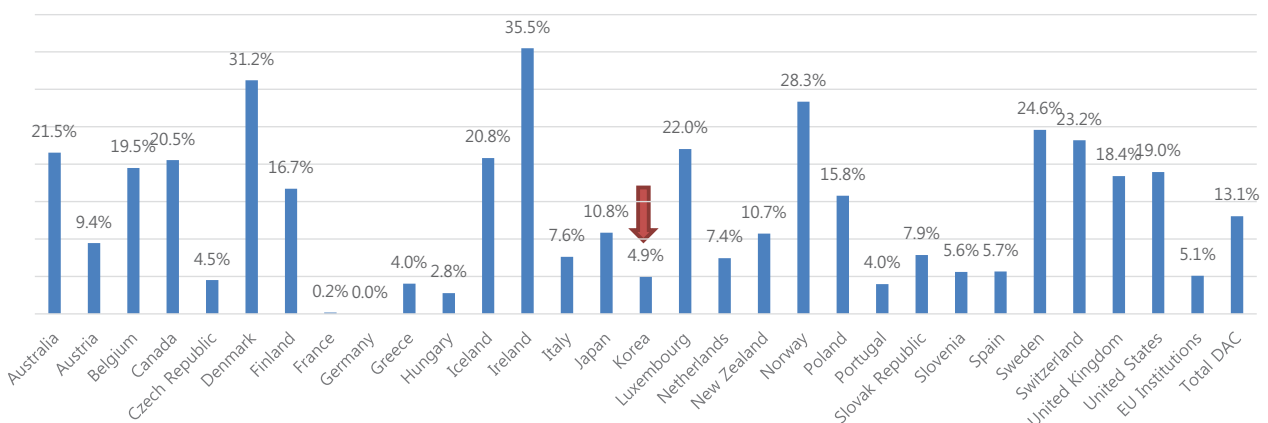
출처: OECD. 2013. Aid for CSOs.

1. 국제사회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 2017년 OECD DAC 회원국의 ODA 중 자국NGO 협력규모

DAC 평균 13.1%, 아일랜드 35.5%, 덴마크 31.2%, 미국 18.4%, 일본 10.8, 한국 4.9%, 체코 4.5%, 그리스 4%, 포르투갈 4%, 슬로베니아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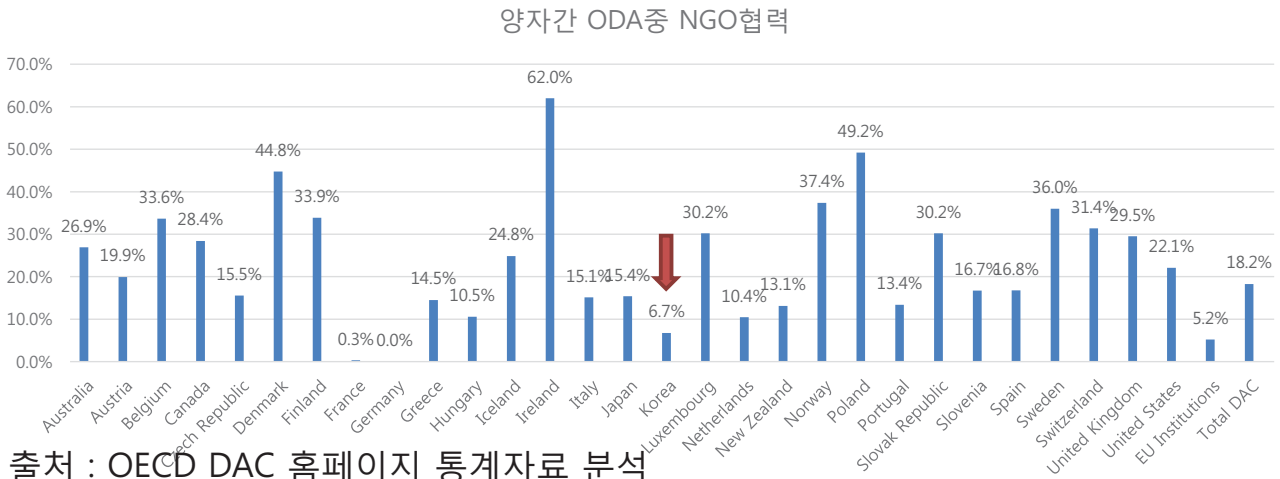
전체 순OD 중 자국NGO협력



출처 : OECD DAC 홈페이지 통계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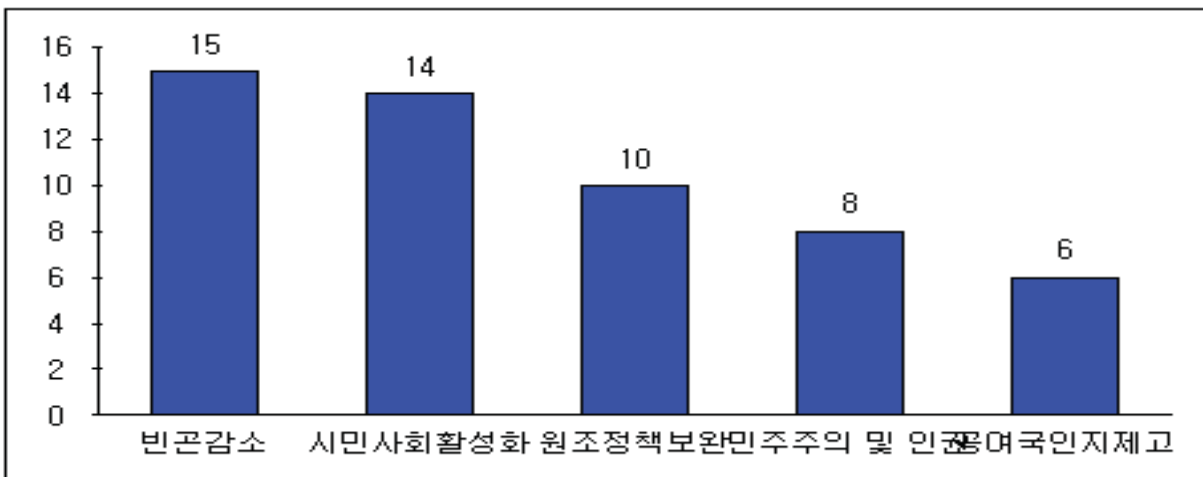
1. 국제사회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 2017년 OECD DAC 회원국의 양자간 ODA 중 자국NGO 협력규모
DAC 평균 18.2%, 아일랜드 62%, 폴란드 49.2%, 미국 22.1%, 일본 15.4%,
한국 6.7%, EU 5.2%, 헝가리 10.5%, 네덜란드 10.4%, 프랑스 0.3%



1. 국제사회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 2011년 OECD/DAC 24개 회원국의 시민사회 파트너십 협력의 주요 목표는 빈곤감소, 시민사회 활성화,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 원조정책보완, 공여국 인지제고임.



출처: 손혁상, 한재광, 박보기. 2011. 국가전략

1. 국제사회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 2011년 OECD/DAC 24개 회원국의 시민사회 파트너십 협력의 주요목표 구성

협력목표	국가	빈도
빈곤감소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호주, EU	15
시민사회 활성화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미국,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EU	14
원조정책 보완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미국, 일본, 포르투갈, 핀란드, 호주	9
민주주의·인권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EU	8
공여국 인지제고	그리스, 독일,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EU	6

출처: 손혁상, 한재광, 박보기. 2011. 국가전략

1. 국제사회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 2011년 OECD/DAC 회원국의 시민사회 파트너십 협력문서

	시민사회협력 관련 전략 문서 13개국	개발협력 관련 정책 문서 (시민사회협력 정책 포함) 18개국
국가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EU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호주, EU

출처: 손혁상, 한재광, 박보기. 2011. 국가전략

2.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1. 역사

-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은 1995년 코펜하겐 유엔사회개발정상회담(WSSD)에서의 대통령의 ODA 증대 담화발표 및 세계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의 분위기 가운데 KOICA 민관협력사업으로 시작됨.
- “NGO의 봉사정신, 저비용으로 개도국의 BHN 분야 지원의 용이함, 국민의 자발적 참여촉진 통한 ODA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정부에 비해 적은 행정 부담, 정부보다 나은 접근성, 정부원조에 대한 상호보완 역할 통해 국제협력효과에 기여” 등의 특성을 배경으로 본격적인 파트너십이 시작됨.

출처: KOICA. 1995연보, 1996

2.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 (2005년)

4.5.2 개발NGO참여확대

- 개발NGO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NGO사업 지원방식 다양화 추진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2010년)

제14조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 ① 국가 등은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등은 제1항의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2.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2010년)

V. 국제개발협력의 기반확대

2.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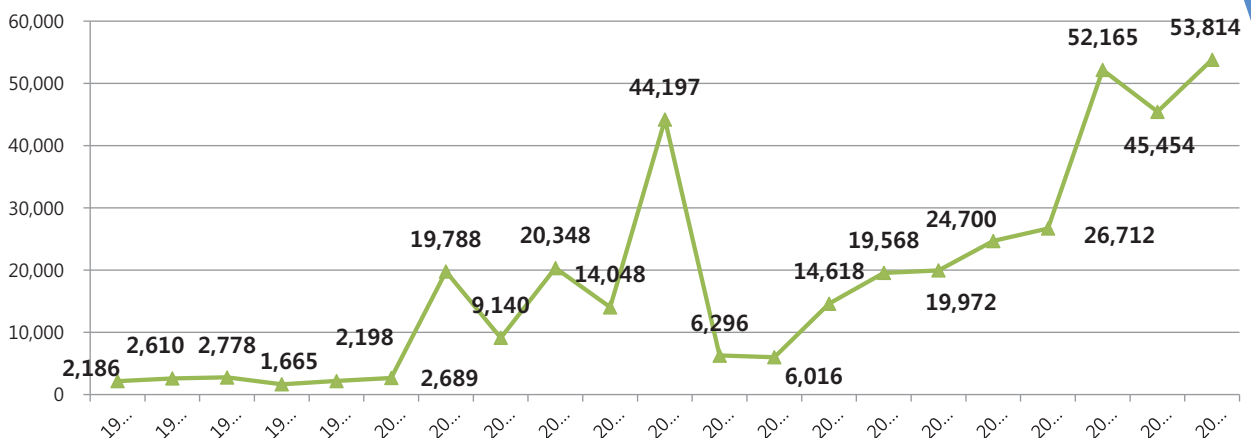
① NGO와의 협력 확대

(추진방안) NGO를 실질적인 개발협력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협력방안 강구

- NGO 역량강화 사업 등 협력사업비를 '15년까지 **10배** 수준확대, NGO 사업비 대비 정부 보조금 비중도 '12년까지 **80%**로 연차별 확대 (간접비 지원 비중도 확대)
- ODA 전 과정에 걸쳐 **NGO**와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 NGO의 재정적, 인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 **NGO** 지원 예산 중 역량강화사업 비중 확대
- NGO간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학습 장려
- 현지 정보 제공 강화
- NGO 지원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장치 마련
- 재외공관(또는 KOICA 해외사무소)을 통한 현장 관리 강화
-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의 투명성 강화

2.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 KOICA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된 총사업비(KOICA 분담금과 민간 파트 자부담금)규모는 1995년 약 21억원에서 2015년 약 538억원으로 21년간 약 24.6배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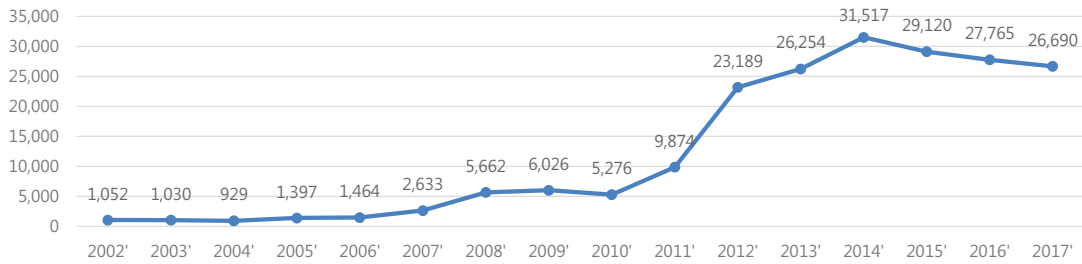


출처:한재광. 2015. KOICA 개발협력WEEK 우리는 하나/민관협력사업 성과 공유회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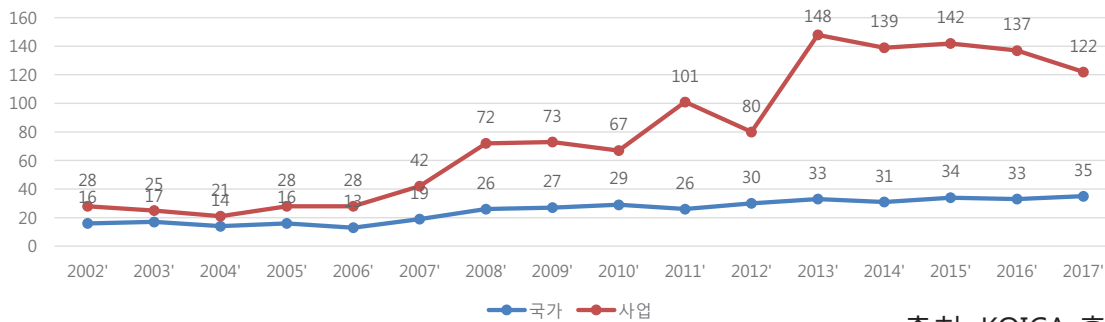
2.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 KOICA 민간협력 사업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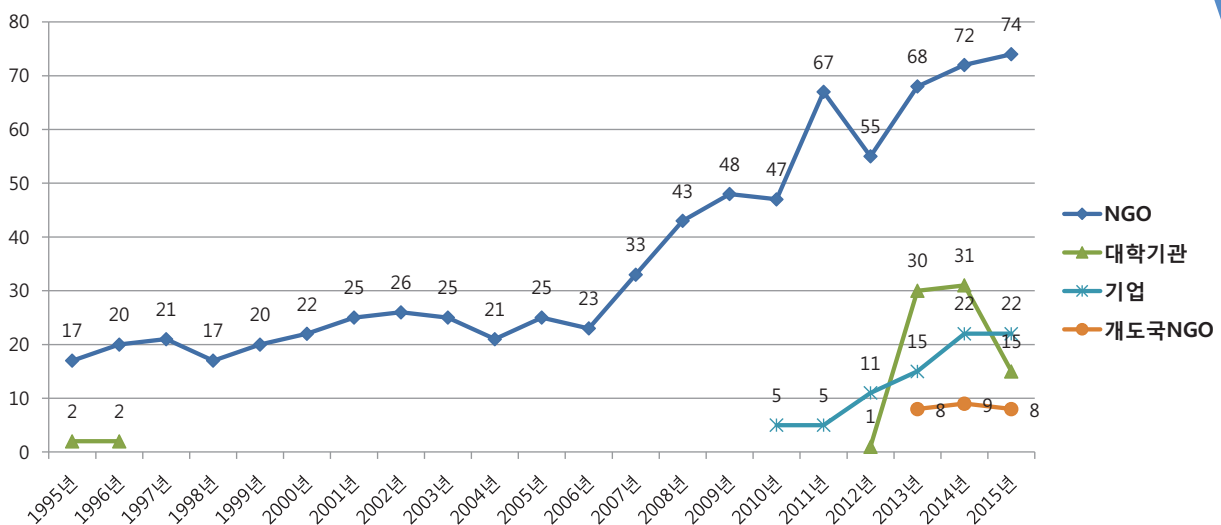
○ KOICA 민간협력 사업 국가 및 사업수



출처: KOICA 홈페이지

2.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 1995~2015년 민간 파트너별 사업 수 변화



출처:한재광. 2015. KOICA 개발협력WEEK 우리는 하나/민관협력사업 성과 공유회 발표자료

2.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2. 현황

- 정부의 시민사회 파트너십은 재정협력방식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정부부처 내 KOICA, 행정안전부, KOFIH,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정기적인 정부-시민사회간 간담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실무위, 평가소위)에 시민사회 측 인사가 참여함.

2.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 정부-시민사회간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담은 정책문서가 부재하며, 국개위에서 (2016년 26차 국개위)에서 '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 지원방안' 정도의 실행방안이 존재함.
- OECD DAC 회원국 다수가 정부-시민사회간 파트너십의 목적, 방향, 내용을 명기한 정책 혹은 전략문서를 작성하여 실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2017년 OECD DAC 동료검토에서도 이를 지적함.

3.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3-1.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

1) 2007년 제 17대 대선

- 대외원조확대 및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 (KCOC, GCAP Korea)

IV. 시민사회의 참여 강화

1. 시민사회는 지원대상 아닌 협력대상
2. NGO를 통한 ODA 집행비율을 5% 이상으로 증대
3. NGO 지원방식의 개선
 - 독립적인 민간위원회나 NGO협의체에서 NGO사업에 대한 정책 및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NGO들에 대한 지원은 NGO들의 독립성과 특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KCOC. 2007. 대외원조확대 및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

3.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2) 2012년 제 18대 대선

- 18대 대선 후보자 대외원조 분야 10대 정책과제(KoFID)
제 18대 대선후보에게 바란다-한국 ODA발전을 위한 제언

Ⅱ. 국제수준에 맞는 원조의 양적·질적 개선

5.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확대하고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

출처: KoFID. 2012. 이슈브리프 11

3.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3) 2013년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드리는 시민사회의 정책제안 (KCOC, KoFID, GCAP Korea)

4. 시민사회와의 협력강화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은 개발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공공외교의 전략적 목표 실현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시민사회가 현장사업 실행단계에서의 협력 또는 지원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 수립의 단계에서부터 사업 심사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의 기여를 증대시켜야 합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교부내 시민사회 파트너십 총괄 대사직과 통합원조 집행기관 내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이사직 신설을 제안합니다.

출처: KoFID. 2013.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드리는 시민사회의 정책제안

3.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4) 2017년 제 19대 대선

○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KoFID)

V.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9.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 ① ODA 정책 수립 및 평가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② 정부-시민사회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③ 민관협력 예산 확대

출처: KoFID. 2017.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3.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3-2. 국회대상 정책제안

- 1) 2012년 19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15대 ODA개혁과제
(ODA Watch, 국제민주연대, 녹색당,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참여연대)

Ⅱ. 국제수준에 맞는 원조의 양적·질적 개선

9. 시민사회를 통한 민간원조를 대폭 확대할 것

출처: ODA Watch 등. 2012. 19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15대 ODA개혁과제

3.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3-3. 정부대상 정책제안

- 1) 2011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준비하며 KoFID 한국 정부에 대한 10대 요구사항

4. 한국정부는 부산총회의 준비과정에서부터 모든 주요의제의 협상과정에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부산총회가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협력의 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한국정부는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세계 시민사회가 합의한 이스탄불 원칙이 부산총회 결과문건을 통해 공식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KoFID. 2011.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준비하며 KoFID 한국 정부에 대한 10대 요구사항

3.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2) 2011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준비하며 해원협의 한국 정부에 대한 10대 요구사항

4. 한국정부는 CSO의 개발효과성 증진이 가능하도록 환경 (enabling environment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을 조성 하고 한국 시민사회가 국제적으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8. 한국정부는 경제개발 중심의 지식공유프로그램(KSP) 내용에 한국의 민주화, 시민사회의 정책감시 및 사회개발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출처 : 해원협. 2011.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준비하며 해원협의 한국 정부에 대한 10대 요구사항

3.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3)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10대 제안 (KoFID 2015)

10. (시민사회협력) 국제개발협력 전 과정에서 의미 있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 분야에 걸쳐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의미 있는 참여 보장)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실행·평가의 전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ODA 민관정책협의회 정례화) ODA 민관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제도나 정책 도입이나 변경 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야 함.

3.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민관협력 예산 확대) 2015년 현재 민관협력 예산은 전체 ODA 예산의 약 2%로 OECD DAC 최하위 수준임. 이미 2011년 DAC 회원국들이 평균 14.4% 가량을 할애하고 있던 것과 대조적임. 제2차 기본계획상에 민관협력 예산을 양자협력의 10% 이상으로 확대 할 것을 명시하고, 사업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시민사회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수반되도록 해야 함.

(인력양성) 시민사회의 개발협력 역량강화를 위해 대학(원),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풀(Pool)의 공동 활용 제도를 시행하고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함.

(세계시민교육 강화)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ODA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NGO와 적극 협력해야 함.

(성주류화) SDGs 성평등 목표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과제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관련 NGO와 협력을 강화해야 함.

출처 : KoFID. 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10대 제안

3.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3-4. OECD DAC대상 정책제언

1) 2012 DAC 동료검토를 앞둔 한국ODA에 대한 ODA Watch의 사전동료검토(Pre-Peer Review) 요약보고서

- ODA Watch가 제시하는 한국 ODA 정책 개선과제

시민사회 및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 정책결정과정에 공식적인 민간의견수렴의 기회를 마련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할 것.
- 민간을 핵심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기획, 실행, 평가 전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할 것.
- 소수의 전문가 외에 다양한 층위의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 범위를 넓힐 것.
- 시민사회를 통한 민간원조를 대폭 확대할 것.
- 통합 CPS 수립을 위해 주관부처 및 시행기관, 국별 지역전문가,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국가지원전략 전문가회의를 설치, 운영할 것.
-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할 것.

출처 : ODA Watch. 2012. 2012 DAC 동료검토를 앞둔 한국ODA에 대한 ODA Watch의 사전동료검토(Pre-Peer Review) 요약보고서

3.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3) 2017 OECD DAC Peer Review 시민사회보고서(KCOC)

II. 시민사회협력 분야

「시민사회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2010)」에 따라 개발 참여 주체로서의 시민사회단체 인정,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제도화 및 재원 마련, 개발을 위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구 등 시민사회단체 개발 효과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실제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시민사회 협력 정책 및 전략 문서를 만들어 파트너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또한 이러한 정책은 정부 일방향이 아닌 상호간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함.
- 정부가 개발협력정책 및 전략 수립과 평가 시 시민사회와의 정책대화 단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제도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환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해야 함.

3.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 제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거래비용 최소화시키고 개발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조화로운 협력 체계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평가소위원회 내 시민사회의 의견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결정 전반에 비중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원조효과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현재 2%에서 OECD DAC 회원국 평균인 10% 이상으로 확대하여 정부 ODA 사업의 효과성 및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함.
- 현지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담아야 함. 정부는 파트너 국가의 우호적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인 현지 시민사회지원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되, 유연한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여야 함.

출처: KCOC. 2017. OECD DAC Peer Review 시민사회보고서

3.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3-5. 시민사회 정책 문건

○ KoFID 이슈브리프 6호. 2011

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개발효과성이다

“개발협력사업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역할의 분담이 아니라 개발효과성을 증진시키는 주요한 요소이다. 수원국의 건강한 발전과정에는 외부로부터의 자원이나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의 하드웨어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체 역량의 강화이며 자력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역량은 사회의 구석구석 소외된 계층에 미쳐 고른 발전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여국인 한국정부는 한국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이 수원국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KoFID. 2011. 이슈브리프 6

4. 결론

-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은 국제사회의 오랜 경험과 노력가운데 구성된 '제도'임.
- 공여국들은 시민사회를 특성있는 주체이자 파트너로 인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파트너십을 정책과 전략문서로 제도화함.
- 한국 정부는 1995년 부터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제도화했지만 목적, 방향,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파트너십 문서는 부재했음.
- 시민사회는 오랜 기간동안 시민사회-정부간 포괄적 파트너십을 공식화 및 제도화할 것을 요구해 왔음.

4. 결론

-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제안해옴.
- 지원대상이 아닌 파트너로서 ODA 정책과정에 참여 제도화
- 정부-시민사회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시민사회와의 협력규모/비율 증대
- 정부-시민사회 정책협의 정례화
- 시민사회 역량강화
- 인력양성, 세계시민교육 강화, 성주류화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 국무조정실. 2005.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
- 데이비드 루이스, 나진 칸지. 2013. 비정부기구의 이해. 최은봉 역. 명인문화사
- 손혁상, 한재광, 박보기. 2011.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정부-시민사회협력관계연구: OECD DAC회원국의 NGO지원정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 17권 4호
- 한재광. 2015. KOICA 개발협력WEEK 우리는 하나/민관협력사업 성과 공유회 발표자료
- 해원협. 2011.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준비하며 해원협의 한국 정부에 대한 10대 요구사항
- KCOC. 2007. 대외원조확대 및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
- KCOC. 2017. OECD DAC Peer Review 시민사회보고서
- KoFID. 2011.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준비하며 KoFID 한국 정부에 대한 10대 요구사항

KoFID. 2011. 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개발효과성이다. 이슈브리프 6. 서울:

KoFID

KoFID. 2012. 제 18대 대선후보에게 바란다-한국 ODA발전을 위한 제언. 이슈브

리프 11. 서울: KoFID

KoFID. 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10대 제언

KoFID. 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10대 제언

KoFID. 2017.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KOICA. 1996. 1995연보. 서울: KOICA

ODA Watch. 2012. 국제민주연대, 녹색당,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참여연대. 19

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15대 ODA개혁과제

ODA Watch. 2012. 2012 DAC 동료검토를 앞둔 한국ODA에 대한 ODA Watch의
사전동료검토(Pre-Peer Review)요약보고서

OECD DAC 홈페이지 통계자료

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의 필요성과
OECD DAC Peer Review
권고 내용

남상은 팀장
한국월드비전

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의 필요성과 DAC PEER REVIEW의 권고내용

2018.07.25
남상은
월드비전 옹호&시민참여팀장

CONTENTS

1. 시민사회의 의미
2. 시민사회와 개발효과성 아젠다
3. 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필요성
4. 개발협력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5. 2018 DAC 동료검토 중 시민사회 파트너십 관련 주요 권고내용

1. 시민사회의 의미

- 시민사회는 공공의 영역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조직으로 가족단위 밖의 모든 비시장, 비정부 조직을 포함한다. 멤버십 기반 시민사회, 원인기반 시민사회, 서비스 기반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기반 조직과 마을조합, 환경단체, 여성인권단체, 농민조합, 종교기반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전문가협회, 상공회의소, 독립연구기관, 비영리 미디어 등이 있다.

The definition of CSOs agreed by the Advisory Group on Civil Society and Aid Effectiveness is: “CSOs can be defined to include all non-market and non-state organisations outside of the family in which people organise themselves to pursue shared interests in the public domain. They cover a wide range of organisations that include membership-based CSOs, cause-based CSOs and service-oriented CSOs. Examples include community-based organisations and village associations, environmental groups, women’s rights groups, farmers’ associations, faith-based organisations, labour unions, co-operatives, professional associations, chambers of commerce, independent research institutes and the not-for profit media.

by Advisory Group on Civil Society and Aid Effectiveness
(시민사회와 원조효과성에 대한 자문 그룹)

- 개발협력분야에서 시민사회란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국내 자생 비정부기구(NGO), 국제 NGO의 파트너 단체 및 UN 산하기구 파트너 단체 등을 의미

2015 한국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2. 시민사회와 개발효과성 아젠다

- “아크라 행동 아젠다” (Accra Agenda for Action)

- 2008년 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회의
(HLF3, 3rd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행위자로 인정, 개발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여를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협력할 것을 밝힘.

[AAA para20]

developing and donor countries will “deepen our engagement with CSOs as independent development actors in their own right whose efforts complement those of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We] share an interest in ensuring that CSO contributions to development reach their full potential.”

-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에 대한 이스탄불 원칙” 2010
(Istanbul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Principles)

-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파트너십”

-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 시민사회는 개발의 독립적 주체로서 정부의 개발정책 형성과정에서의 참여자로서의 역할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함. 각국 정부는 시민사회가 개발협력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할 것을 약속.

-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개발효과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여와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독려

- [BOD para22]

- Civil society organisations (CSOs) play a vital role in enabling people to claim their rights, in promoting rights-based approaches, in shaping development policies and partnerships, and in overseeing their implementation. They also provide services in areas that are complementary to those provided by states. Recognising this, we will:

- a) Implement fully our respective commitments to enable CSOs to exercise their roles as independent development actors, with a particular focus on an enabling environment, consistent with agreed international rights, that maximises the contributions of CSOs to development.

- b) Encourage CSOs to implement practices that strengthen their accountability and their contribution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guided by the Istanbul Principles and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 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의 역할

- Change agents

- 민주주의와 굿 거버넌스를 위한 시민사회의 기본적 역할

- 정부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 능동적 참여자로서의 역할

- Donors of aid, channels for aid, recipients of aid

- 개발협력 서비스 전달의 주요 주체

- 원조의 공여자이자, 원조의 채널이자, 원조의 수원자로서의 역할

* 출처 : How DAC members work with CSOs, 2011

3. 개발협력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필요성/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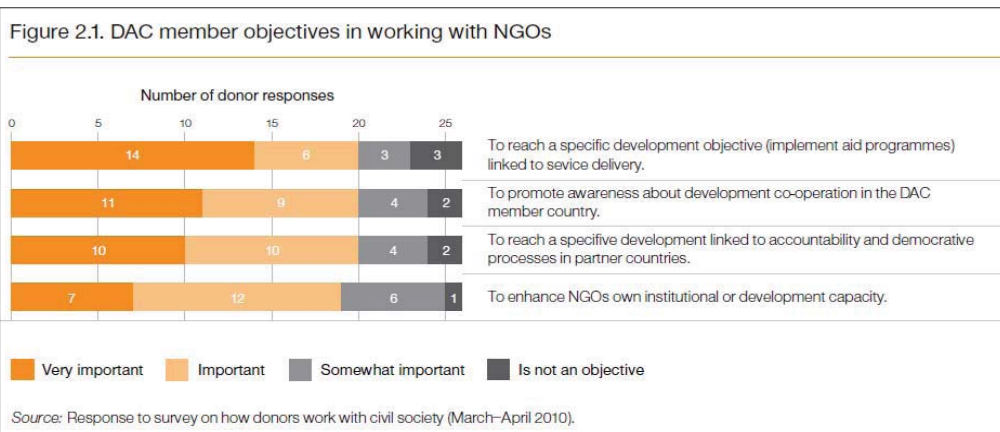
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간 파트너십이 중요한 이유는

- 효과적인 개발사업/서비스 수행자. 특히 최빈국,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과 효과적으로 일하여 절대빈곤 해결에 기여함.
- 개발관련 아젠다 공론화에 기여함.
- 개발정책 형성 및 실행에 있어 민주적인 과정을 가능케 하고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함.
- 재난, 분쟁 등으로 인한 인도지원 환경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
- 새롭고 혁신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시도함.
- 시민사회 자체가 강화됨.

3. 개발협력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필요성/중요성

DAC 정부들이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이유는

- 직접 서비스 전달을 통해 특정한(분야, 대상 등) 개발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개발협력에 대한 사회 내 인식제고를 위해
- 파트너국가들에서 개발사업을 실행할 때 민주적인 과정/절차와 정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 NGO 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 시민사회섹터에 대한 분석과 시민사회가 개발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강화를 지원하는 개괄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함.
- 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규정이 시민사회의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포함시켜야 함.
- 개발협력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전략적 비전에 시민사회 강화가 포함되어야 함. 이는 정치적 관심과 지지를 담보하기 위해, 지역 및 분야별 우선순위 연계를 위해 중요함.
- 프레임워크에는 목적과 목표, 원칙, 이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시민사회 파트너십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함.
-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부산 파트너십의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목표가 포함되어야 함. 이는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의 주체로 인식하고, 시민사회에 의한 효과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정부가 증진해야 하며, 시민사회가 개발효과성과 책무성을 강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 정책은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이해 가능하게 만들어져야 함. 이를 파트너 국가의 공식언어로 발간하는 것도 고려할 것.
- 시민사회와 함께 정기적으로 성과를 검토해야 함.

출처 : Partnering with Civil Society : 12 Lessons from DAC Peer Reviews에서 내용 발췌 정리

[공여국 사례] ‘덴마크 시민사회전략’ (MFA Denmark, 2008)

1.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목적과 목표
 - 이 전략의 장기 목표는 강하고, 독립적이고, 다양한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표로, 덴마크의 개발전략과 연계되어 있음.
 - 9개 전략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내용은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서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공론의 장 촉진, 인권에 초점을 둬, 결과중심 등을 포함
2. 시민사회의 당면 도전과제 분석
3.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역할
 - 시민사회단체들의 일반적 역할, 다양한 유형과 역할에 대해 기술
4.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위한 기본 원칙
 - 역량강화, 옹호활동(advocacy), 서비스 전달, 소득증대 활동, 파트너십의 조건, 파트너십을 위한 덴마크 시민사회의 기여
5. 협력을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과 방식
6. 대중적 지지기반 및 정보공유 활동 지원
7. 전략 이행계획

[DAC 주요 관찰 결과 및 권고사항]

“한국 정부는 이행파트너이자 독자적 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
(p.22) 권고사항 12번

제 목	내 용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의 국제적 노력	(p.34) 글로벌 의식 <u>SDGs에 대한 홍보 및 의사소통 기회 확장</u> 을 위해 시민사회와 다른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협력.
2. 개발협력 비전과 정책 체계	(p.47) 정책체계 “다자원조 파트너에 관한 비교적 명확한 정책지침과는 대조적으로 민간부문, 학계 및 <u>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지침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u> ”

* KCOC 국제개발협력 이슈광망 제37호(2018년 3월)에서 일부 발췌

제 목	내 용
3. 개발재원	(p.56) 양자ODA 배분 “NGO, 민관협력사업(PPP) 및 프로그램 원조에 대한 비중은 낮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NGO 채널을 통해 지원되는 양자 ODA 비율은 2015년 2% (3천9백만 달러) 였으며, 공동 프로그램 및 기금에 대한 지원은 7% (1억 3천 8백만달러)였다. 시민단체, 기억 혹은 학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KOICA의 민간협력사업(PPP) 예산은 2010년 8백만 달러에서 2015년 4천6백만 달러로 증액되었지만, <u>2010년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했던 10배 증가(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는 2015년까지 민관협력사업 예산을 2010년 9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10배 확대한다는 내용 포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u> ”

제 목	내 용
<p>5. 한국의 원조지원 수단과 파트너십</p>	<p>(p.78-80) 개발협력 파트너십</p> <p>“시민사회, 학계 및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은 대부분 개별사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이 지향하고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p> <p>“한국은 개발협력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다른 DAC 회원국에 비해 시민사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혹은 장기적인 예산지원 합의가 상대적으로 적다.”</p> <p>“시민사회의 기여가 정책입안 과정에 비중 있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p> <p>“시민사회에 제공하거나 시민사회를 통해 집행하는 예산은 모든 DAC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p> <p>“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경우 개발 및 인도주의적 NGO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p> <p>“협력국 및 취약국에서의 사업선정 및 이행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민사회의 독립적인 감시자 (watchdog)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p>

제 목	내 용
<p>6. 한국의 성과관리, 평가 및 교훈</p>	<p>(p.100) 평가를 통한 교훈</p> <p>개발협력의 주요 성과를 알리기 위해 NGO등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u>합동 교육프로그램, 공동모니터링 및 공동평가 등 혁신적인 시도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u></p>
<p>7. 한국의 인도적 지원</p>	<p>(p.111) 효과적 지원 제공, 파트너십 및 수단</p> <p>인도지원 NGO들의 역량강화 및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한국의 국가 역량강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p> <p>한국이 NGO들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취약국 지원 전략은 위기 상황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p> <p>한국 NGO들은 한국의 행정적 요구사항들이 해외파견 활동의 현실에 맞지 않음을 여전히 지적하고 있다.</p>

1. 국제개발협력 이슈광판 제37호, KCOC, 2018.3
2.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협력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2011
3.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대한민국, OECD, 2018
4. ACCRA AGENDA FOR ACTION, 3RD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2008
5.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BUSAN, REPUBLIC OF KOREA, 2011
6. How DAC members work wit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OECD, 2011
7. Partnering with Civil Society-12 Lessons from DAC Peer Reviews, OECD, 2012
8. The Civil Society Strategy-Strategy for Danish Support to Civil Society in Developing Countries, Danida, 2008

시민사회 역할 및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참여방법

오순옥 본부장
KCOG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방법



KCOE 기획본부 오순옥 본부장

목 차

1.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의 의의와 시민사회의 역할
2. 홍보 대상
3. 참여 방법
4. 참여 절차 및 일정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의 의의와 시민사회의 역할

➤ 의의

개발협력분야의 정부-시민사회 간 협력원칙을 합의하는 최초의 공식 작업
시민사회와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시험의 장

➤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 내부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Leaving no one behind)

민주적이고 독자적인 참여

국내외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사례 학습 (한국 및 파트너국가 적용가능성 점검)

'협의체 참여', 목표 및 원칙 합의, 공동 문서 작성

공동문서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통과를 위한 노력에 참여

채택 후 국내외 시민사회 홍보, 제도개선, 교육 등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 참여, 시민사회 내 환류 역할

홍보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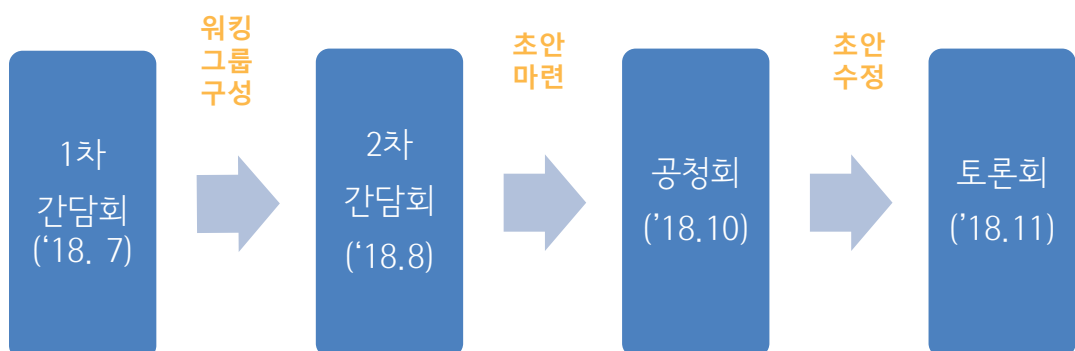
- KCOC 회원단체 (136개)
- 해외 NGO 협의체 (9개)
- KoFID 회원단체 (26개)
-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회원단체 (514개)
- 한국NPO 공동회의 (49개)
- 기타 단체나 개인

※외교부 요청에 의한 브레인스토밍회의, 준비회의 총 2회 KCOC, KoFID 참여

참여 방법

- **간담회 및 토론회 참여**
 시민사회 주도로 총 4회의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7월~11월)
 간담회 및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 개진
-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실무그룹(협의체) 참여**
 8월 중 실무그룹 참가자 모집
 (KCOG, KoFID 홈페이지 게재, 각 기관에 공문발송)
 참가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참여 절차 및 일정(안)



Q&A